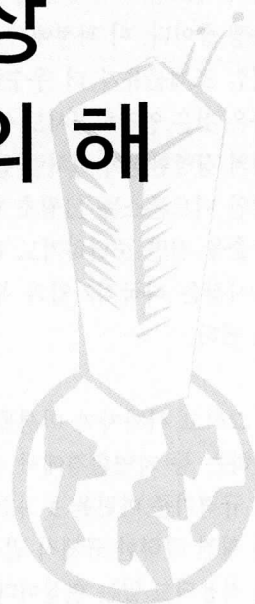


2006년, 국내 우유시장 확대를 위한 해법모색의 해



백 강 기
서울우유협동조합 지도상무



금년 한해동안 원유생산, 가공, 유통단계별로 제도개선을 위한 논란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이해 당사자간의 이견만 확인하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한·미 FTA협상은 우리에게 많은 부담과 함께 우리 낙농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한국 낙농산업은 비전이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은 낙농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하면 금방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낙농가 중심의 제도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제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기호에 맞는 우유 및 유제품을 공급하여 친숙한 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유수급 현황

금년도 국내 낙농기수는 지난해보다 5% 정도 감소한 8,400여호로 예상되며, 젖소사육두수는 465,000두 정도로 호당사육두수는 55.4두 예상

된다. 원유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960톤 수준이 예상되며, 우유소비량은 우유감아 팔기를 감안하여 1% 수준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유생산조절제를 도입된 2002년을 전후로 점차 원유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우유 소비가 정체되고 수입량 증가로 잉여원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낙농제도개편과 한·미 FTA 협상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FTA협상, 목장경영환경 악화, 후계자 부족 그리고 도시개발 등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목장을 계속할 것인지 한번쯤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래의 낙농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목장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우유시장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농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간의 이해와 양보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2006년도에는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열정을 보여왔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집유제도 개편 문제는 수급 안정을 골자로 집유조합과 유업체간 직거래제도 도입을 위해 이해당사자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게 되었다. 농림부의 시안을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인 낙농육우 협회가 전국단일집유체계를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하여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한국유가공협회도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낙농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제시한 대안이 상호간의 입장만 확인하고 표류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다가오는 한·미FTA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미FTA 문제는 일부에서 그 결과 여하에 따라 낙농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국과의 협상을 계기로 유럽, 캐나다, 중국, 일본 등의 여러 국가와 협상이 진행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고 이 경우 우리 낙농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FTA협상이 체결되면 단시간 내에 낙농제품의 관세철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낙농가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경영환경이지만 목장 경영체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낙농가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정부의 확고한 비전설정과 절대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지법개정 논란

목장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위해 축산분야의 공동된 해결 과제로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이 활발히 활동을 하였다. 농지법 개정의 주목적은 축사부지를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켜 남아도는 농경지의 보존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용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축산환경 문제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더 이상 축산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축사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낙농생산기반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더욱이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한 친환경 농축산업으로 전환하여 경종과 축산업이 동반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와 주무부처인 농림부 내에서도 의견조율이 되지않아 적극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각 계에서도 다양한 찬반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회에서도 몇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왔지만 농업계의 다양한 의견으로 심사를 미루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 단체들이 농지법 개정에 앞장서서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를 설득하고 있지만 축산인 모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우유소비촉진과 낙농의무자조금제도 도입

근본적으로 낙농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유소비확대가 필연적인 과제이다. 언제부터인가 우유를 대체하는 건강·웰빙식품이란 것들이 등장하면서 우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우유의 주소비층인 19세 이하 인구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우유소비가 정체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한정된 우유시장 내에서 상호간의 시장쟁탈을 위한 유업체간 각종 이벤트 행사, 광고, 판촉활동 등을 통해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형할인점에서 우유 감아팔기가 관례화되고 있다. 그러나 유업체의 공격적인 판촉활동이 국내 우유시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낙농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그나마 현재의 시장을 유지하고 미래의 시장확대를 위해 유업체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브랜드 혁명과 홍보을 통한 소비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유브랜드명이 서울우유, 매일우유, 남양우유 등으로 업체명을 내세웠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에게 친숙하고 함축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우유제품명으로 바꾸고, 소비자들의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켜 소비를 늘려보고자 병우유 형태의 제품을 출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웰빙과 건강 추구 인식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능성 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켜 우유소비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낙농가도 우유소비촉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한 낙농의무자조금제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미 낙농선진국에서도 우유시장의 정체현상 때문에 수십 년 전에 도입하여 우유판매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검증된 제도인 점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며, 낙농가 스스로 낙농역사상 큰 이정표를 만든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낙농가들 모두가 납유하는 물량에 따라 리터당 2원씩 부담하여 우유의 소비촉진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임의자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그간 우유의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낙농의무자조금 도입을 계기로 향후 체계적인 우유 소비촉진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금년부터 의무자조금제도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낙농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5월부터는 자조금을 거출하기 시

작하는 등 의무자조금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이미 TV와 라디오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상업광고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유업계와 낙농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유소비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향후 소비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007년을 기대하며 ...

미래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꾀직한 현안들이 계속 논의 중에 있는 만큼 다가오는 2007년도에는 우리 낙농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확대에 진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기대해 본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대내외적 변화와 함께 밀집사육두수 제한, 축산분뇨규제 강화 등으로 낙농가로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낙농가 스스로도 목장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헤쳐는 안될 것이다. 또한 낙농업계는 한·미FTA 협상을 계기로 여타국과의 협상이 줄이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2007년도는 내일의 밝은 모습으로 낙농부문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가오는 위협요소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